

주간변혁산별

제19호

■2008.8.18(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심야노동철폐 15만이 싸우자

현대차자본 '8+10' '공장별 협의' 제시 ... 노동자 분열 고도의 전략
노조, 노동시간단축 5대 원칙 지켜야 ... 하청노동자·비정규직 외면 안돼

현대기아차 자본과 노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투쟁이 8월 폭염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현 시점에서 심야시간대를 없애면 생산량이 연 25만5000여대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려면 시간당 생산량을 19% 이상 올리기 위한 설비공사 확충에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연일 재벌언론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떠들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사실상의 ‘노예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주간2교대에 대한 저항전선을 쳤다.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는 지난 12일 “주간 2교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협력업체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무리한 시행은 재고돼야 한다”는 탄원서를 현대차 윤여철 사장에게 전달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들은 “물량확보가 보장되는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여철 사장은 “회사는 현 수준의 물량이 반드시 보장돼야만 주간연속 2교대가 실시될 수 있으며, 노조와 협의시 협력회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



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자본이 약자인 하청업체를 동원해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2009년 주간2교대제 실시를 연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청업체를 동원한 주간2교대 저항 전선

2005년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9년 1월부터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2006년에는 주간2교대제를 위해 현재의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뀌기로 했다. 2007년에는 2008년 10월 현대차 전주

공장 시범실시를 합의했다. 기아자동차도 똑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자본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주간2교대를 연기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자동차회사 노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심야노동을 중단시켰다. 일본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야간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해왔다. 2008년 세계 5위 수준의 현대기아차 그룹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심야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야만적 노동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선 60년 전 사라진 심야노동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건부 참가서’로 산별노조와 현장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전술을 성공시킨 현대차자본은 지난 8월 13일 주간8시간, 야간 10시간 노동이라는 ‘8+10’ 안을 던졌다. ‘9+9’ 안을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10’을 내면서 자본은 공을 노동조합으로 떠넘겼다.

현대차지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노동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8+8을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2교대제인 ‘9+9’는 현장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때 회사는 ‘8+10’이라는 새로운 안을 던지며 “공장별 물량조정 및 인원재배치 기준 마련을 위해 별도협의체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방안을 만들어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8+10에 숨겨진 자본의 교묘한 전략

‘8+10’은 노조의 주장인 ‘8+8’을 받

아들이는 척 하면서 뜨거운 감자인 ‘물량문제’를 노조의 책임으로 넘기는 교묘한 안이다. 회사는 공장별(위원회별) 협의를 통해 물량이 적은 공장의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8+8’을 하고, 물량이 많은 곳은 ‘8+10’을 하자는 것이다. ‘8+8’을 주장하는 노조의 명분을 받아들이면서 물량도 손해보지 않고, 물량에 따른 공장별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만드는 1석 3조의 제안인 셈이다.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8+8’, ‘8+9’, ‘8+10’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다. 2003~4년 한국사회는 ‘주5일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바꾸는 수준이었고,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가 아닌 임금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용인했다.

2008년 ‘주간2교대’라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현대기아차 노사를 넘어, 금속노조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투쟁이다. 현대기아차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노동계급의 원칙을 지

키지 못한다면 이는 자본이 원하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현장 착취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5만 금속노조가 함께 싸워야

현대차지부는 ‘임금손실,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없는 3무(無)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가 얘기하는 3대 원칙에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칙이 빠져있다. 한국노동운동사상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투쟁인 ‘주간2교대’의 핵심 5대 원칙은 ▲야간노동완전철폐 ▲생활임금보장 ▲노동강도강화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청노동자 동일적용이다. 적당한 타협은 상시 야간 등을 통한 비정규직 착취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주간2교대 시행에 발맞춰 경주, 울산, 대전충북 등 현대기아차 부품사가 많은 지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자본은 강력한 단일전선을 형성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2월까지 실행위원회 운영’으로 ‘하나 마나한 합의’를 한 후 울산, 경주지부 등에서 ‘노사공동대책위’(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만도 역시 ‘완성차 시행시 그에 따라 실시한다’며 공을 현대차에 떠넘겼다.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한 전문위원은 회사가 낸 ‘8+10’안을 현대차지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를 표시했다. 주간2교대제는 현대차지부만의 투쟁도 아니며, 현대차만의 투쟁으로 승리할 수도 없다. 15만 금속노조 전체가 함께 싸워 150만 금속노동자 전체의 승리로 만들어내야 한다. 적당한 타협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현대자동차 혼자 싸워서 안된다. 15만이 함께 싸워야 한다.

백골단 물대포 게릴라로 맞서자

8.15 100회 촛불집회도 폭력탄압 157명 연행 ... 꺼질 수도 꺼지지도 않는 촛불

8월 15일 광복절날.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촛불투쟁의 구심인 청계천이나 서울시청도 아니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혀있지도 않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 조합원들을 모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많은 간부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노총 앞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전국에서 올라온 간부들은 간단한 집회를 마치고,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 도심으로 향했다.

그럼에도 이날은 지난 6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지역의 간부들이 서울로 올라와 이명박 정권과 맞서 싸운 의미 있는 날이었다. 금속노조는 지부별로 버스를 대절해 3천명이 넘는 간부들이 서울로 모였고, 명동→종각→퇴계로→동대문을 행진하며 이명박의 공안탄압에 게릴라 투쟁으로 맞섰다.

물대포 경찰방송차로 연행하다

영등포에서 집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원래 7시 서울시청에 계획되어 있던 100번째 촛불문화제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막히자 명동 한 국은행 앞으로 집결했다. 노동자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더니 저녁 8시 무렵 1만여명에 이르렀다. 광우병 대책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명박을 심판하는 촛불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시 10분경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은 즉시 파란색 물대포를 발사하고, 곧바로 연행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찰관기동대(백골단)은 오



직 연행자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 ‘마일리지’에 미쳐 닥치는대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명동을 빠져나온 시위대는 탐골공원으로 향했다. 바로 그 때 방향을 잘못 잡은 경찰방송차와 물대포가 시위대에 포위,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물대포 장비를 꺼내 거리에 내동댕이쳤다. 백골단에 대한 분노로 경찰방송차와 물대포는 ‘백골단’이 진격해올 때까지 노동자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폭력탄압, 게릴라로 맞서다

동대문에 모인 시민들에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0시 30분 경 해산을 선언했지만 경찰의 진압방식에 분개한 시민들은 무리를 지어 다시 거리로 나섰

다. 경찰은 깃발을 들고 있거나 색소가 조금이라도 묻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했고 시민들은 강하게 저항하며 맞섰다. 시민들은 “마일리지 얼마나 쌓였나?”, “광복절날 일본군 순사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감을 드러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무자비한 폭력에 게릴라시위로 맞섰다. 퇴계로, 동대문, 종로를 거치며 곳곳에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가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주지부, 기아차지부 사

내하청분회 등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촛불이 꺼져간다는 뉴스만을 보던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날 투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6.10 이후 두 번째 간부상경투쟁이었다. 그러나 모처럼 서울에 올라온 간부들은 어떤 지도나 지휘도 받지 못했다. 대오는 우왕좌왕 그 자체였고, 조합원들은 정신이 없었다. 경남지부의 한 간부는 “도대체 지도부는 뭐하고 있고, 백골단에 맞설 전술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꺼져서도 안되며 꺼질 수도 없다. 백골단에 맞서 전면적인 게릴라시위로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합법파견 판치는 노동지옥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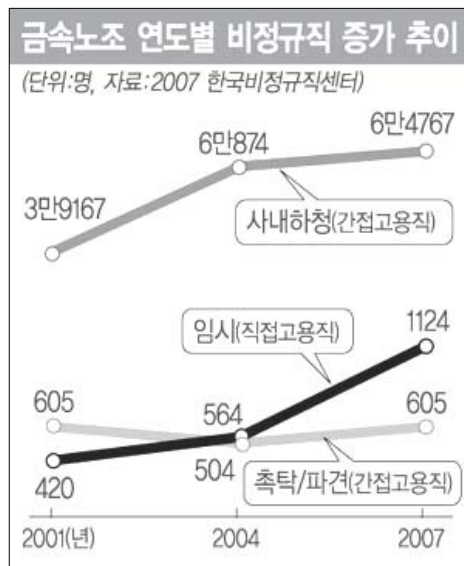
자본, 파견법 개악으로 '일본 따라하기' ... 일본노동제, 금속노조 '1사1조직' 주목

2008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조항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재계는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기간제 사용 4년으로 연장 ▲사용기간 적용제외자 50세 이상으로 확대 ▲차별금지 1012년까지 유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 근로 허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더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 공정까지 파견을 확대하려는 자본이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견대상의 확대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청을 '합법적 파견'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제조업 공장은 직접생산공정까지 합법적인 파견노동자로 뒤덮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의 일본 따라하기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켰던 '일본 따라하기'다. 일본의 파견법은 1985년 법 제정 당시에는 통역과 가이드 등 13개 직종에 국한됐지만, 1999년 의료 일부와 항만, 건설, 경비, 제조업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4년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일본에서도 그 이전까지는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의 '사내하청과 위장하도급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2004년 파견대상의 확대로 사내하청의 문제는 소멸



되고 합법적 파견노동자의 문제로 쟁점이 이동한 것이다. 일본의 파견노동자는 300만명을 넘었고 파견시장규모가 4조엔을 돌파한지 오래다. 급료는 시급제로 보너스도 없고, 교통비도 자기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1일부터 3개월 계약까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

일본의 최대 인력파견업체인 '굳윌(Good Will)'에 소속되어 있는 임시직 구직자들은 270만명에 달하고, 1일 평균 파견인력은 34,000명에 이른다. 일용직들은 파견업체로부터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일자리를 배정받아 찾아가서 일한다. 파견사원의 활약상을 그린 '파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상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한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간혹 어느 공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요구안 관철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릴 뿐이다. 노조 조직률이 하향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말자

한국의 활동가들은 "우리는 일본 노동운동처럼 되지 말자"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러나 자본의 전략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등 객관적 조건은 일본의 뒤를 이미 따라가고 있다. 아니 더 어려운 조건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33%로 우리보다 낮다. 조직율도 18~19%로 아직 우리보다 높다. 문제는 주체적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근래 일본의 노조 활동가들이나 진보적 학자들은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산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1사1조직' 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나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조직화는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생산공정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파견 노동자로 채워진 죽음의 공장,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친재벌정책 서민경제 족박

[특집 경제위기]③ 이명박 경제정책 ... 공기업 사유화 저지 촛불과 결합해야



세계 경제의 신용위기와 물가 및 유가 상승에 이은 공황의 가능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경제의 포로”다.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10년 내 세계 7대 경제대국)은 늪에 빠져있다. 이명박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고물가, 고유가를 뒷전으로 한 수출장려정책과 규제완화, 사유화 등 제도정비를 통해 기업살리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곡물·물가인상을 방치한 수출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중심축인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환율정책, 저금리정책을 사용했다. 이것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달러당 환율을 높여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자는 것이었다. 이명박의 공약인 성장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달러당 환율이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수출이 호조했다. 올

상반기 국제수지상 통관수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무려 20.4%나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적 곡물 및 유가 상승으로 수출량 증가보다 수입량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올 7월까지 무역수지는 5월을 제외하고 적자였다. 즉, “수출 제품의 40% 가까이가 수입 원자재”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과 맞물려 수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최용식 21C경제학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이다.

곡물 및 유가가격은 거품이 꺼지면서 즉, 수요가 공급량 보다 적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여전히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적인 문제는 세계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하락 현

상, 즉 판매부진 상황이다. 미국 및 유럽 경제의 불투명, 중국 성장의 둔화 등으로 한국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수익성을 얻을 수 없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재빠르게 움직인 것은 역시 주식시장이었다. 지난 11주 동안 외국인 ‘큰손’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10억달러, 이달에도 50억달러가 넘는 매도 개입을 단행해 원화 가치의 하락을 가까스로 막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뚝방에서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형국이다.

51개 생필품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개입적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다.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를 기록했으며 이명박이 가격을 꼭 잡겠다던 휘발유, 라면, 밀가루 등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무려 7.8%나 상승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재벌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고물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반기에 흑시라도 곡물과 원유의 거품이 꺼진다면, 물가상승의 주범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가스, 물, 지하철 및 버스 등) 인상이 될 것이다. 수출확대 성장정책은 곡물과 원유가격 급등으로 생활상의 고통이 가중된 노동자 서민의 이익을 희생시킨 정책이다. 이런 이유에서 강만수의 퇴진 주장이 한

나라당 내부 뿐 아니라 국민여론에서도 높다. 경질 찬성이 50%(반대 38%)에 이르렀다.

물가 성장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

무엇보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물가나 성장이 나’라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못 했다.

지난 주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최근 이자 부담에 취약한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타이, 말레이시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 IMF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등이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빌린 단기외채가 2금융권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상기시켰다.

기획재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이 생산, 소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강만수 경제팀은 원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이 주요 40개국 1만1천564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로 39위를 기록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전체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67.4%로 중국(92.6%), 대만(70.6%), 태국(68.0%), 싱가포르(67.7%)에 이어 5번째로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97년 외환위기의 씨앗을 품었던 대외부채는 1분기 말 기준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 당시의 두 배가 넘는다”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과 채권을 모두 합한 넓은 의미의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기업과 가계 부채 합은 GDP의 30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취하려는 한국은행 정책을 따르면, 수출 및 기업활동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더 높아져 은행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저금리 및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면 물가인상 등으로 대중적 저항이 심화된다. 무엇보다 저금리 수출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해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은 지난 상반기에 0.5%로 거의 ‘제로’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6.2%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2001년의 -3.6% 이후 가장 낮다. 총고정자본 중 설비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1.1% 증가하는데 머물러 지난해 11.0%와 비교해 급격히 위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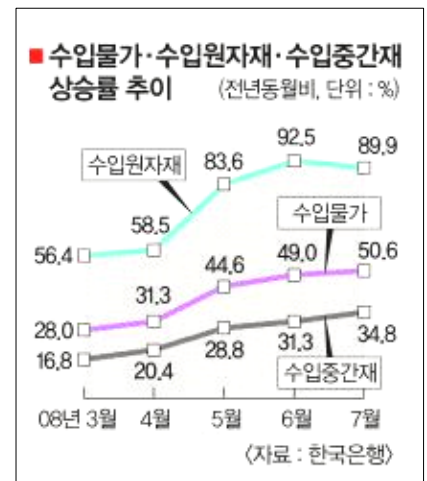
기업들은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주식시장, 곡물, 원유 시장 등 투기 시장으로 몰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물가나 성장이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갈팡질팡 할 것이다.

일관된 방향 - 사유화, 규제완화

그러나 일관된 정책방향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명박이 꾸준히 추진하려 했던 것은 규제완화, 사유화 등을 통한 기업살리기 환경 조성이다. 김상조 교수는 “강만수팀은 선거공약인 ‘747’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지주회사법, 경영권 방어장치, 출자총액제, 기업가와 노동자의 양벌정책 등에 대해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촛불저항에도 불구하고 8·15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정책은 공기업 사유화였다. 사유화 대상은 모두 27개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자회사, 하이닉스,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이다. 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인하할 것이다.

사유화에 반대하는 촛불의 힘으로 정부는 사유화 후에도 가격규제, 정리해고 최소화, 낙후 지역 공공서비스 유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믿겠는가.

한나라당 나성린은 “아직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행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경제실패론을 반박했지만 촛불정국 자체가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대중적 분노의 대상이 된 사유화,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촛불시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으로 촛불시위대에 공공부문 사유화 대상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제2의 촛불행쟁의 전환점이 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이명박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끝>

방송장악은 이명박 독재의 서곡

[기고] 언론만 장악하면 의료민영화 등 모든 것 할 수 있다 ... 노동자 함께 싸워야



지금은 헛소리를 가끔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때는 옳은 소리를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을 상대로 반독재 투쟁을 할 당시에 기회만 되면,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고 외친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한 악랄한 행위들만으로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 출신을 YTN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임기가 보장된 언론재단 박래부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에게 문화부 2차관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무려 7차례나 사퇴하라고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정연주 사장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토록 한 뒤 이사 11명 중 과반수를 친 이명박 정권 인사로 채운 뒤, 감사원과 검찰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을 탈법, 불법적으로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와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이 작전하는 것과 한 치도 어

긋남이 없었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KBS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이명박 정권의 다음 목표는 MBC다. 이미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언론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MBC와

PD수첩에 대해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등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와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악랄한 독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란 이름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은 무관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국절' 채택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3.1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바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친일 부역세력을 헌법적으로 사면하려는 행위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어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헌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표면적인 목표와 관심은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책임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변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셈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없애거나 바

꾸려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유람을 간 것인지 공부하러 간 것인지 잘 모르지만, 4월 9일 총선 실패 직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라는 사람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쳐 유보하기로 한 계획을 이재오라는 자가 떠들기 시작할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모든 상황은 하나로 통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박한 그의 줄개들이 목숨을 건 것은 단 하나다. 무슨 얘기인가? KBS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면, 신문에 이어 모든 언론을 장악하게 되고,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헌법 119조 2항을 폐지하는 일, 한반도운하, 의료민영화, 물사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

그런 점에서 KBS와 MBC를 지켜내는 싸움은 방송인과 언론노조 조합원들만의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이런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감옥밖에 없다. 아직은 방송 현업인들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방송을 이명박 정부에 내 준 것은 아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나의 삶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감옥행을 선택해야 할 때다.

신화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명박 폭정 가리는 금메달 환호

올림픽에 숨겨진 자본의 경쟁 ·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 사회적 연대 되새겨야

지난 8월 8일부터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다. 한국의 박태환, 장미란의 금메달 소식, 수영 금메달 8관왕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 등 보통 사람들이 흔히 근접하기 힘든 최고 선수들이 세계적 시합에서 이겼다. 선수들이 승리할 때마다 제일 환호하는 것은 이를 후원하는 기업들이다.

SK텔레콤은 박태환 선수를, 현대차 그룹은 양궁을 후원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장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아들 정 의선이다. 한화그룹과 KT는 사격을 후원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장은 SK텔레콤 고문 조정남이 맡고 있다. SK그룹은 핸드볼협회 공식 후원사이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이창환 선수는 두산중공업 소속이다. 삼성은 계열사 소속 선수 중 28명이 국가대표로 뽑힌 상태다. 태권도의 손태진, 마라톤의 이봉주 등이 메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딴 금메달 숫자로 보면, 현대차그룹이 양궁 3개로 일등이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8개를 딴 마이클 펠프스는 미국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식 장려금만 2억원이다. 후원사인 스피드사(영국)는 7관왕을 수립할 경우 100만달러(약10억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펠프스에게 최소 2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돈과 경쟁만이 판치는 올림픽

그러나 이런 돈과 경쟁으로 뒤덮힌 '올림픽 정신' 어디에도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공식 후원기업 아니면 어떠한 광고도 허용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 선수들은 기업들이 후원하는,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삼성, SK, 현대차 등의 후원을 받고 그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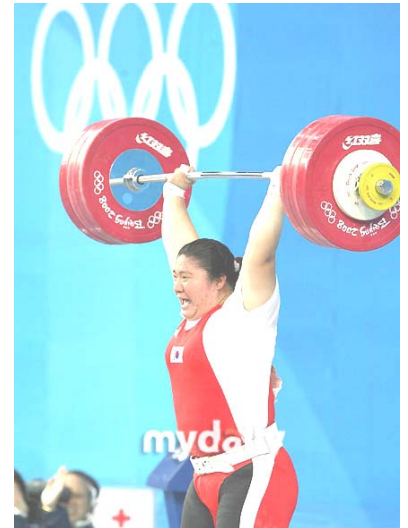
재벌들의 후원을 받아 금메달을 딴 극소수 선수들은 펠프스처럼 사회적 명예와 부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의 유혹에 빠진다. 88서울올림픽 당시 미국의 칼 루이스를 누르고 우승한 벤 존슨, 2000시드니올림픽 여자 육상 3관왕 메리언 존슨(미국),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선 100m 우승자 저스틴 게이틀린(미국) 등이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하거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클린 올림픽'을 내걸며 도핑테스트를 강화했다지만, 4500여명의 샘플 중 30~40명 정도는 도핑테스트에 양성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림픽은 경쟁을 통해 승리하면 사회적 부를, 탈락한 낙오자들은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경쟁정신'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이견희, 정몽구가 사회적 부를 얻는 것이 정당하고, 낙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숙자, 실업자들은 빈곤이라는 탈락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도록 한다.

금메달 환호하는 이명박과 노동자

올림픽의 또다른 숨겨진 그림자는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대한 정당화다.



개막식에서 중국 내 56명의 소수민족을 상징하는 어린이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중국국기인 오성홍기와 함께 입장해 '하나의 중국'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 중에서 소수 민족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정부가 티벳 등 소수민족들이 '하나의 중국'에 함께 한다는 거짓이미지를 연출하려다가 그 정치적 속셈이 들뜬 셈이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도 이명박도 올림픽을 즐겨보며 모두 한국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 올림픽 때문에 10%대의 이명박 지지율이 23.4%로 올라갔다. 그러나 장미란의 금메달 소식이 들리는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는 사유화, 규제 완화, 노동자 탄압 등 공안정국 조성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올림픽 속에 숨겨진 경쟁 논리와 국가주의 정당화를 경계하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